

**보도자료**

보도일시	2017년 11월 4일(토) 조간
담당자	이수일 KDI 규제연구센터 소장 (044-550-4127, suillee@kdi.re.kr)
배포일시	2017년 11월 2일(목) 11:00
배포부서	KDI 홍보팀(044-550-4030, press@kdi.re.kr)

## 2017년 출입기자단 정책세미나 혁신성장의 키워드: 규제개혁

- 일 시: 11월 2일(목) 16:05~17:05
- 장 소: KDI 대회의실

□ KDI는 11월 2일 '혁신성장의 키워드: 규제개혁' 주제의 정책세미나를 개최,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선행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,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

- 규제개혁은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생산성이 낮은 부문에서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자원 재배치를 촉진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으나,
- 칸막이 규제, 포지티브 시스템 등 현행 규제체제와 경쟁을 제한하는 진입·영업규제는 활발한 혁신활동과 창업을 저해
- 또한 규제개혁을 규제완화와 동일시하거나 생명, 안전, 환경 분야는 개혁대상이 아니라고 인식하는 등 규제개혁의 정당성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 부족도 규제개혁의 지속 추진에 실질적인 장애요인

- 이번 세미나에서는 기존 규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혁신성장의 전제조건이 될 규제개혁의 방향성 및 실천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함.

□ 무엇보다도 규제정책도 공공정책의 일환으로서 '증거에 기반한 정책수립(evidence-based policy making) 문화'를 형성함으로써 규제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

- 최근 살충제 계란 파동은 우리 사회에서 '증거에 기반한 정책수립 문화'가 얼마나 부실한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으며, 살충제 가슴기 등 유사한 사건이 거듭됨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음.

- 살충제 함량에 따라 차별적인 달걀 처리를 권고한 유럽과 달리, 우리나라는 살충제 검출 농장에서 생산된 달걀은 잔류농약 허용기준치와 상관없이 전량 폐기 처분하여 지나친 공포심만 유발하면서 농가의 불필요한 피해를 초래

-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활용돼야 할 '증거'는 과학적 사실(scientific facts) 외에도 시장의 현황·추이, 정책대상자의 행동방식 등을 포괄하며, 규제의 설계·집행 및 평가과정에서 이런 증거들이 다각도로 수집·활용돼야 함.

- 우리나라는 그간 정부에 의한 일방적 정책수립 과정에서 증거에 기반하지 않는 정책수립 문화가 만연했고, 이는 비판·처벌에 민감한 공무원 의식과 결합돼 정보공개를 극히 꺼리는 왜곡된 구조로 연결됨.

- 반면 영국, 미국 등은 정보공개\*에 매우 적극적이며, 최근엔 공공정책에 행동과학을 접목시켜 국민의 실제 행동양태를 반영해 정책의 효과성,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.

\* 영국은 2013년 행정데이터연구네트워크(ADRN)를 조직, 행정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관련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결과를 제도·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정책의 합리화 도모

□ 규제개혁은 '정부와 민간의 권한과 책임이 조정'돼 명령통제 방식에서 신뢰 기반 공동규제로, 규정·절차 중심에서 목표·성과 중심으로 전환해야 효과적·효율적 규제가 가능

○ 규제는 위험을 관리하는 것인데 이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은 현장마다 다르며, 각각의 특수한 상황을 알고 있는 것은 현장의 피규제자들인 만큼 이들과의 협업이 반드시 필요함.

- 영국은 1974년부터 기존의 명령통제 방식에서 탈피, 목표를 설정하고 규제당국과 현장의 피규제자들이 협업하는 방식으로 산업안전규제를 탈바꿈한 결과, 산업재해율이 지속 하락하여 2015년 EU 가운데 산업재해율 최하위권 국가를 기록

\* '11년 기준 영국의 재해율은 0.41로 독일의 1/6, 미국의 1/8이며, 만인사망률은 0.04로 독일의 1/4, 미국의 1/9 수준. 우리나라 만인사망률은 0.79로 영국의 20배

○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민간의 창의·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피규제자의 수동성만 강화하는 규정·절차 중심 규제방식에서 벗어나 성과·목표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함.

- 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해도 법령상 안전조치규정을 따랐다면 형사상 책임이 없음. '14년 3개 금융사의 정보유출 사고가 있었으나 각각 1천만 원 벌금 납부가 전부

□ 이종산업·기술의 융복합 시대에 혁신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칸막이 행정과 규제를 극복하고 네거티브 규제 전환 등 '혁신에 친화적인 규제체계'를 마련해야 함.

○ 소관 규제에 집착하고 타 규제에 무관심한 칸막이 행정은 혁신이 자유롭게 발현되는 시장환경 조성을 저해하는 핵심요인임.

- 의료기기와 통신기기 경계에서 국내 출시가 거부된 당뇨폰, 자동차와 건설기계 사이에 놓여 4년을 끈 트럭지게차 등 융복합을 인정하지 않아 사장되거나 희생된 혁신기업·제품 사례가 다수

○ 네거티브 규제 전환은 사전규제 최소화를 통해 민간의 혁신활동을 촉진한다는 취지를 감안, 통상의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 외에 포괄적 정의 규정, 유연한 제품·서비스 분류체계, (규제샌드박스 등) 시범사업 및 규제의 특례적용 활성화 등을 포함.

- 2012년 화장품법 개정은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 전환의 대표적 사례로, 사용가능 원료목록 대신 배합금지원료를 지정하는 규제방식을 취한 결과 화장품 생산액과 종사자수가 각각 27%, 32% 증가

- 국내에서는 3D 프린터 사례와 같이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도 기존 제품·서비스 분류체계에 해당 품목이 없어 정부조달시장에 접근하지 못하고 생존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반면, EU는 혁신 카테고리\*를 따로 두어 기존 분류방식에 적합하지 않은 혁신적인 제품·서비스를 분류체계에 포섭

\* 예를 들어 EU는 기존의 자동차 분류체계인 L1~L6로 분류되기 어려운 혁신제품을 새로운 카테고리인 L7에 넣어 시장에서 수용할 수 있게 함.

- 영국은 '15. 11월 금융 분야 규제샌드박스 도입 후 2차례에 걸쳐 55개 신규서비스에 대해 시범사업을 허용하고 규제특례를 부여

○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친화적 규제체계를 확산하려면 로드맵 수립과 같은 경로의존적 인식을 탈피하고, 실패를 성과로 인정하는 문화, 실패를 통해 배울 수 있다는 전향적 자세가 요구됨.

□ 혁신과 창업 촉진을 위해서는, 기존 규제가 기득권으로 작용하는 현실에서 탈피, '경쟁을 제한하는 진입·영업규제의 개선'을 위한 실천적인 전략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

○ 우리나라 인구 1천명당 의사수가 OECD 평균이 되려면 약 90년 소요. 이런 상황에서 우수인재의 의대·치대 쏠림현상은 진입규제로 인해 국가 전체의 인적자본 배분이 얼마나 왜곡되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임.

- 금융·의료·관광 등 유망 분야에 대한 정책역량 집중, 시범사업의 적극 활용, 성공사례 창출로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 지지 확보, 규제개선 과정에 기존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담론 형성 등 규제개선을 위한 실천적 전략 마련이 필요함.

□ **최근 규제연구센터가 경제전문가 489명을 대상으로 한국경제, 규제 개혁 정책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, 10명 중 9명은 현재 한국경제의 상황이 '냄비 속 개구리'와 같으며, 10명 중 8명은 우리나라의 규제개혁 성과가 일본보다 못하다고 답변**

- 한국경제가 여전히 '냄비 속 개구리'라는 주장에 대해 공감한다는 답변이 88.1%(매우 공감 45.0%, 약간 공감 43.1%)
- 한국경제가 냄비 속을 탈출할 시간이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63.3%가 1~3년, 27.1%가 4~5년, 이미 지났다는 답변도 5.6%
- 우리나라의 최근 규제개혁 성과가 일본에 비해 저조하다는 답변이 77.9%(매우 저조 35.0%, 약간 저조 42.9%)
- 저조한 규제개혁 성과의 근본원인(1순위)으로 24.7%는 '규제개혁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'을 꼽았으며, '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의지 부족(21.0%)', '정치권의 규제개혁 추진의지 부족(19.4%)', '기득권 세력의 반발(19.4%)' 순으로 응답